

지역청년센터 설치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해 정책 필요한 청년에게 가닿는 전달체계 구축해야

사각지대 해소와 효과성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되어야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개편 방향과 원칙,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청년기관의 기능과 역할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정책 개발, 대상자 발굴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선도해왔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20개였던 청년 정책사업은 2022년 50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양적인 확대만으로는 이행기 청년, 특히 서울시 청년이 직면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서울 청년의 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울 청년정책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게 가닿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청년정책의 환경 변화와 서울 청년의 욕구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이 서울 청년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전달되어 청년의 삶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 확대만으로는 서울 청년의 다양한 욕구 대응 어려워...체계적 전달체계 필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요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간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태동하고 확장해왔다. 이 때문에 청년기관의 역할 또한 정책 전달체계가 아닌 청년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되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영역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최근 새롭게 발견되는 취약청년(부모 등 성인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사회적으로 단절된 은

둔·고립청년,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다문화와 탈북 등의 이주배경 청년) 문제는 청년정책의 확대만으로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처럼 점차 분화되는 청년의 정책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사각지대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전문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 기관 또한 개별사업의 운영체계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위해 시·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진단해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독립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으나,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대폭 확대되었다.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행정체계로서 국무조정실과 영역별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로 분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 집행체계 역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집행체계(거점청년센터와 지역청년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행정체계로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과 집행체계인 청년기관(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오랑, 청년교류공간, 청년허브, 무중력지대)으로 구분된다. 청년기관은 2022년 10월 기준 5개 유형 2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진단기준(① 포괄성: 서비스 통합성, 서비스 다양성, 대상자 포괄성, ②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정보접근성, ③ 연속성: 절차적 연속성, 서비스 지속성, ④ 책임성: 서비스 전문성, 피드백)을 적용하여 행정자료와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등 2차자료를 분석해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진단하였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결과, 포괄성·접근성·연결성·책임성 문제 직면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진단한 결과,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정책은 있지만 정책을 전달할 전달체계는 있으

면서도 없는 모호한 상황이었다. 서울 청년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상정하였으나, 정책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청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접점을 통해 접근성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청년 집단 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청년의 다양성에 부응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의 종류도 많아져 개별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의 욕구 다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대상자와 욕구에 따라 분절된 사업 체계로 인해 서울 청년의 복합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종합정책의 특성상 중앙과 지역, 영역별로 분절적인 정책 집행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은 연속성 측면에서 서비스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으며, 책임성 측면에서도 청년정책의 성과나 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수요자 관점에서의 욕구기반 신청, 참여 등의 과정이 분절되어 있고 점점 또한 다원화되어 있다. 청년정책 경험이 있는 청년이더라도 다른 욕구가 발생하면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투입자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만족도와 효능감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

[표 1]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결과 요약

구분	진단내용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내용상으로는 욕구 다변화 대응 가능 • 서비스 통합, 관리 조정 제약 •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청년 집단 내 정보 격차
연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중심 집행체계로 서비스 분절 심화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추진으로 청년정책 성과, 서비스 질 관리 어려움

청년정책 전문가 포럼, 관계자 간담회 통해 4개 핵심과제 도출하고 심층 검토해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공간 TF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서울청년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전달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포럼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오프라인의 지역청년센터인 '서울청

년센터'의 기능과 역할 설정이다. 현재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 청년정책 집행체계의 최일선에서 청년을 만나고 정책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에는 전달체계 구조와 운영체계 전반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서울청년센터가 서울시 청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청년을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사자 기반 서비스 연계이다.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집단이지만, 그간 청년정책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의 연계가 미진하였다. 특히 성인이행 과정에서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취약청년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정책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 집행체계는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위탁 방식에 관한 근본적 검토와 더불어 민간위탁 기반 정책 집행체계 구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전달체계 연계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성 계획을 고려하여 광역단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중심·통합성 기반 전략목표 수립해 서울 청년 포괄하는 전달체계 구축해야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중심성'과 이행기 청년의 다면적인 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통합성'에 기반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목적은 '서울 청년의 행복 증진'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5년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이 상정한 정책효과를 도출하고, 청년정책 추진 예산, 조직, 인력 등의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서울 청년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상정하였다. 청년 당사자 중심성과 통합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5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당사자 중심성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욕구와 서비스 접근성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며, 통합성은 청년 개개인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 청년센터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사업은 서비스 추진체계를 통합 조정한다. 둘

째,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이다. 청년 욕구기반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핵심사업의 서비스 질 관리를 향상시킨다. 셋째, 참여자 의견반영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참여자 의견반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선, 사업 참여자에 관한 환류 및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통합이다. 청년 마음건강, 은둔고립 청년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사자 중심으로 정책 간 상호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결이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정책정보와 참여자 정보 데이터를 통합 조정하는 관리망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광역청년센터 실무자-지역청년센터-실무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료화함으로써 추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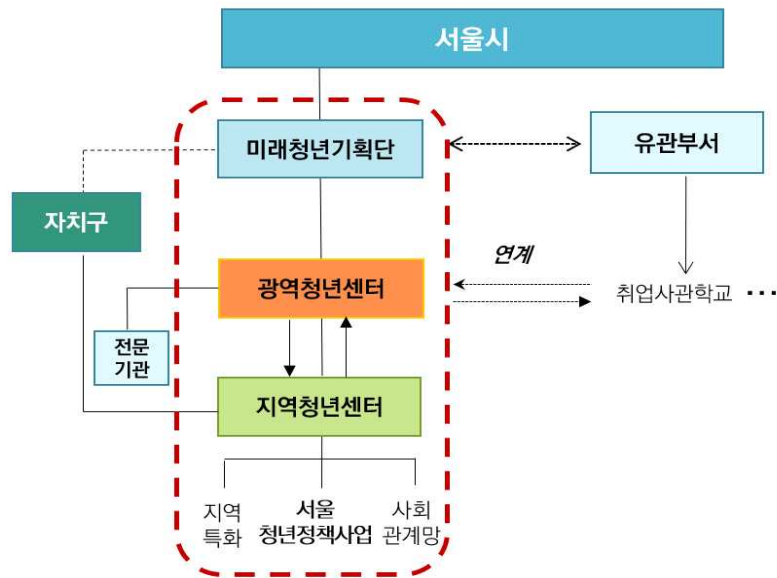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

시-광역-지역 연계 속 서울청년센터, 지역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광역청년센터-지역청년센터'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서울청년센터를 잇는 광역청년센터로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사실상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청년 교류공간은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광역청년

센터와 지역청년센터로 실효성 있는 핵심 기능을 이관하는 등 청년기관 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서울시, 광역청년센터, 지역청년 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기관 재편 방안이다. 자치구당 1개소의 서울청년센터를 운영 하여, 서울시 전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이 서울 청년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고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청년센터가 지역사회 청년의 사회안전 망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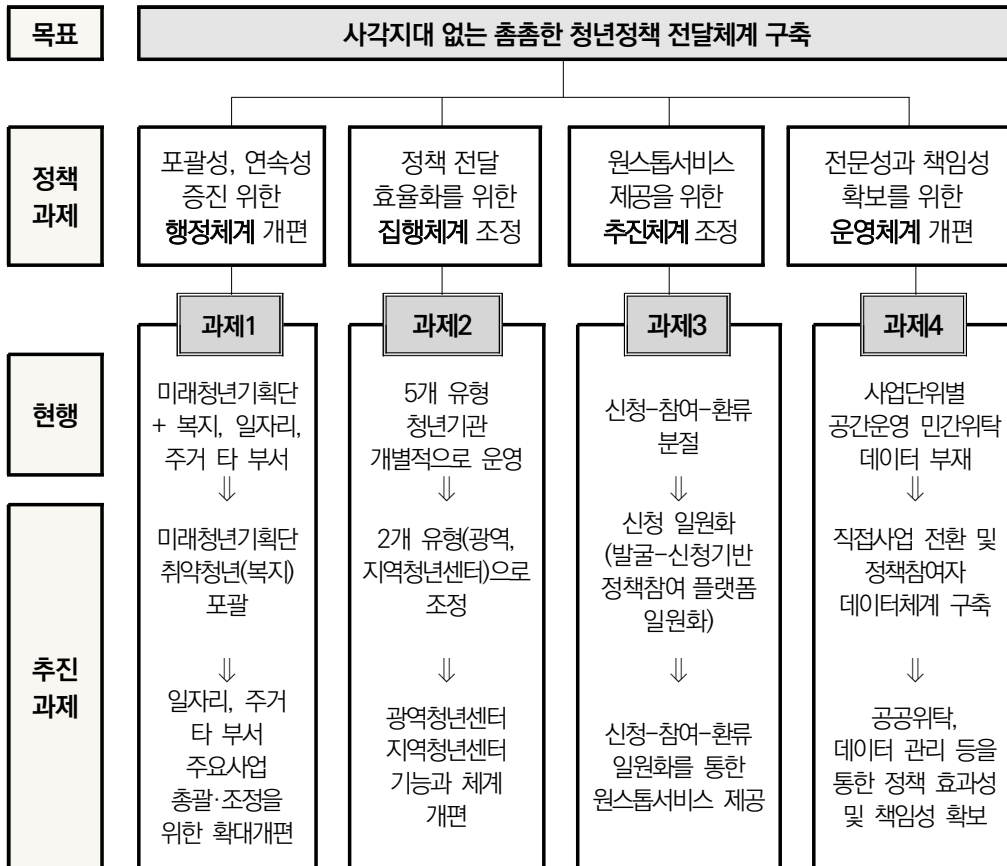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조(안)

서울 청년 모두에게 가닿을 수 있는 전달체계 통해 청년정책 질적 전환 필요

서울시 청년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을 선도해왔으며, 양적 확대와 정책 혁신을 통해 서울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과거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청년을 위한 공적 자원의 크기를 키운 것만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공은 양적 확대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확보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할당하고, 사각지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을 발굴하여 청년정책으로 포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 청년정책의 관성과 경로의존성을 벗어나 청년정책이 공공정책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적으로 확대된 서울시 청년정책의 질적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① 포괄성과 연속성 증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② 정책 전달 효율화를 위한 집행체계 개편, ③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체계 조정, ④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을 제안하였다.



[그림 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